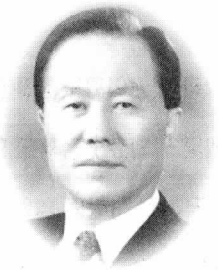


전문인이 인정받는 사회



글 · 김광태

대림성모병원 이사장(본회 부회장)

지난해 의료대란을 겪고 난 후 병원계의 어려움이 좀처럼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의약분업으로 인해 야기된 이 의료대란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대부분의 병원들은 의사와 전공의들이 진료현장을 비워 환자진료에 적지 않은 차질을 빚어야 했고, 대란이 끝나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날로 줄어드는 내원환자와 그로 인한 수입감소로 큰 곤란을 겪고 있다.

무엇보다도 의료대란 직후부터 일기 시작한 병원 의사들의 이직현상은, 원천적으로 의사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온 중소병원들에게는 물론 일부 대학병원들에게도 적잖은 충격을 주었다. '병원이 서울지역 권에만 있으면 의사 구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는 그야말로 어느 유행가 제목과 같이 "아~ 옛날이여"가 되고 만 것이다.

잘못된 의약분업으로 환자들 자신이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됐다

그런데 잘못된 의약분업으로 병원들만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데 보다 큰 문제가 있다. 바로 환자들 자신이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됐다는 점이다. 환자들 입장에서 보면 병에 걸린 것만도 서러운데 이전과는 달리 의사로부터 치료를 받은 후

아픈 몸을 이끌며 처방전을 들고 약을 조제받기 위해 이 약국 저 약국을 전전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하고, 진료·처방·조제에 따른 비용부담까지 늘어나는 이중·삼중의 고통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됐다.

그렇다면 주위(의료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의약분업제도를 시행한 정부입장은 어떤가. 의약분업 시행이후 참으로 딱한 입장에 놓인 것은 아마도 정부가 아닌가 싶다. 의약분업을 시행하면 항생제 등의 사용량이 크게 줄어든 것이라는, 분업에 따른 기대성과는 고사하고 국민과 의약계로부터의 엄청난 반발과 건강보험 재정적자라는 전혀 예기치 않았던 상황에 직면하게 됐기 때문이다.

의약분업은 정부의 시대적 흐름을 무시한 관료주의적 발상에 기인

‘왜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됐는지’라는 의문은 이제 거의 진부한 이야기처럼 돼 버리고 말았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해결점이 없는 상황에서 다시 한 번 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의약분업으로 인한 오늘의 사태는 한마디로 정부의 시대적 흐름을 무시한 관료주의적 발상에 기인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비록 반대가 있더라도 일단 시작만 해놓고 보완해 나가면 결국 제대로 돌아가게 된다’는 식의 정부가 오랫동안 견지해 온 제도운용의 고전적 발상이 바로 그것이다. 아마도 지난해 의료계의 반발이 그렇게 심하지만 않았어도 정부의 이런 발상은 효험을 봤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정부는 제도시행을 추진하면서 그 이전엔 생각할 수 없었던 엄청난 규모의 ‘의료대란’을 일으킬 수 있는-그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의사들의 크게 변화된-잠재된 의식을 감지하지 못하는 실수를 범했다.

뿐만 아니라 의약분업을 시행하면 이전에 약국에서 자신의 돈으로 약을 사먹던 대다수 국민들이 의료기관과 약국을 모두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보험재정이 크게 악화되고, 국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간과한 점 역시 제도의 실패를 불러 온

의약분업이 시행되기 전 의료계와 사회일각에서 주장한 대로 먼저 시범사업을 시도해 보았거나 일본과 같은 임의분업을 채택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신중한 정책을 펴나갔더라면 정부는 결코 지금과 같은 어려운 국면에 직면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주된 요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들어 전문인들이 인정을 받고, 그 진가를 발휘하는 '전문화 사회' 가 돼 가고 있다.

의약분업이 시행되기 전 의료계와 사회일각에서 주장한 대로 먼저 시범사업을 시도해 보았거나 일본과 같은 임의분업을 채택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신중한 정책을 펴나갔더라면 정부는 결코 지금과 같은 어려운 국면에 직면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의약분업 시행이전 '시범사업', '임의분업' 이야기는 의료계 뿐 아니라 사회 여러 분야 전문가들에게서 부단히 제기돼 왔다. 그러나 이들 전문인들의 의견은 그들이 의료인이어서 객관성이 없거나 객관성이 있더라도 소수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거의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최근 들어 사회 조직의 상당부분이 전문가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전문인들이 인정을 받고, 그 진가를 발휘하는 '전문화 사회' 가 돼 가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이런 전문인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데 아직까지도 인색한 것 같다.

국민과 의료계, 정부와 의료계간의 신뢰구축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정부가 이런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고 즉각적으로 대처하지 않고는 앞으로도 결코 올바른 정책을 펴나갈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사회 각계에서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하고 있는 의약분업의 교훈이 이런 점을 잘 말해 주고 있다. 정부가 사전에 전문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제도시행에 따른 충분한 검토를 했더라면 결코 국민·정부·의약계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오늘과 같은 의약분업 사태가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렇다고 의약분업으로 야기된 사태의 모든 책임을 잘못된 정책에 돌려야 한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의료계 스스로도 반성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점이 적지 않다는 이야기다.

정부가 사전에 전문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제도시행에 따른 충분한 검토를 했더라면 결코 국민·정부·의약계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오늘과 같은 의약분업 사태가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정부로 하여금 의료계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제도를 시행한 그 이면엔 의료계에 대한 정부와 국민들의 불신이 적지 않게 깔려 있었을 것이라는 점은 결코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의료계가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의 보다 발전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국민과 의료계, 정부와 의료계간의 신뢰구축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런 신뢰구축은 작은 균형이 큰 균형으로 이행해 나가는 조직체계를 형성하는, 작은 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본다. 이런 조직체계는 그야말로 전문인들로 구성된 병원 조직이 스스로 각 전문분야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상호유익을 바탕으로 조화있게 운용해 나감으로써 구축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이런 신뢰구축이 확산되면 단순히 병원에 대한 믿음 뿐 아니라 나아가 사회 전반에 걸친 신뢰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2001

의료계가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의 보다 발전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국민과 의료계, 정부와 의료계간의 신뢰구축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런 신뢰구축은 작은 균형이 큰 균형으로 이행해 나가는 조직체계를 형성하는, 작은 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본다.
